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역사나눔마당 <기조발제문>

일제강점기 역사청산과 재외동포의 역할

최봉태 |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1. 머리말

저는 현재 한국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2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의 발언의 순서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일제강점기 진상규명운동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재외동포 특히 재일동포 전쟁피해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 되겠습니다.

2. 왜 이제 와서 일제피해 진상규명인가?

저는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있으면서 일본의 언론기관으로부터 종종 인터뷰를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기자들로부터 흔히 왜 이제 와서 한국에서 일제시대 동원피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도대체 한국 정부는 이제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질문을 받는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법률은 한국정부나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국적포기선언까지 하면서 한국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저항권을 행사하며 투쟁하였고,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한국정부와 정치인들이 마지못해 만들게 한 것이지 한국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국적포기투쟁을 하였다는 것을 혹시 보도를 통해 들어 셧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제 피해자들에 있어 한국정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을 하면서부터 자주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한국의 헌법에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한국정부는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왔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피해자들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재판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패소를 하였고 그 패소이유 중에 하나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도대체 1965년에 한국정부가 맺은 협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일본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데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보겠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문서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그 공개마저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를 당하여야 했고 결국 한국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여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여 올해 겨우 문서의 공개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피해자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보호를 받기는커녕 그들의 권리의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문서조차 보지 못하는 것이 일제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그 동안 받아온 대우 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한국정부는 일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권리실현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종의 가해행위를 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한 것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함)제정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냉대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보다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한국 정부에게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만이라도 밝히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진상규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추진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였는데 처음 공동집행위원장이 될 때에는 길어도 약 반년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부담이 예상되는 금전지원관련법도 아니고, 누가 보아도 일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무슨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회의원 들에게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유서까지 작성하여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서를 보면서 그야말로 일제 피해자들이 그 동안 60년이 다 되도록 한국 내에서 이등국민으로 차별되게 방치되어 왔는가를 실감하게 되었고 도대체 피해자들이 아직 해방이 된 것인지 조차 의문을 품게 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 저항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적포기투쟁 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일제 피해자들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마지막 호소이었습니다.

한국의 일제시대 피해자들은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규탄하기 위해 결국 2003년 8월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집단으로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지난 2004년 2월 법률이 겨우 만들어 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로소 일본의 기자들은 진상규명법이 만들어 지게 된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쟁이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상규명운동의 원동력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냉전과 군사독재로 인해 그 동안 미루어져 왔던 일제 피해자문제가 냉전의 붕괴 및 한국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비로소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진상규명운동은 60년 동안 닫혀져 있었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진상규명작업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참다운 우호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일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다고 믿고 있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으면서 이루어진 우호란 가해자들간의 우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문제의 인도적 처리라는 인권차원에서 더 나아가 한일간의 평화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의 발생에서 보듯 한일간의 평화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문제를 제대로 처리함으로 인해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과제가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일간의 평화 인프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과거 침략전쟁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남겨진 큰 과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의 원인에는 침략전쟁의 책임을 외부에서 추궁하여야 할 한국이 냉전에 의해 분단되고 전쟁을 하여야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 내에서 일제 피해자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재일동포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러한 한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것 이상으로 국민이면서 방치되어 왔던 것이 재외동포이며 특히 재일동포는 그 형성의 뿌리가 일제의 강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한일협정 관련 문서들이 전면공개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 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일동포들의 전쟁피해문제에 대해 한일협정을 맺을 때 한국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소위 청구권자금이 들어왔을 때에도 재일동포들은 신고의 대상에서조차 배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일동포들의 전쟁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책임감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한일협정이 공개된 지금부터 한국정부는 새롭게 시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일제로부터 진정한 민족해방의 상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우토로 철거문제도 일본측이 일제강점기의 피해라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한국정부는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냉전속에 방치된 재일동포들의 전쟁피해문제는 단순한 인권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을 극복하고 탈냉전의 동아시아 질서를 만듦과 동시에 이념으로 이질화된 남북간에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을 이루는데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일동포 전쟁피해자들중에 BC급 전범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BC급 전범문제는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청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협정조인 이후의 국내조치로서 개인청구권의 보상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밖' 이라고 협정 체결에 즈음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에 동원되어 부상을 당한 군인 군속이었던 재일동포들 역시 자신들의 문제가 한일협정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한국정부가 외교적 교섭을 해 주기를 요구하며 한국에서 헌법재판을 하기도 했으나 문서공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신도할머니와 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재일동포들도 보호의 사각에 방치되어 왔으

나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한을 풀 수 있도록 되어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쪽에서는 한일협정공개에 따라 개인피해자 해결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고, 북쪽에서는 북일간에 교섭이 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일동포들의 전쟁피해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국회의 움직임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의 귀국을 촉진하고 지원을 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노력하고 있고, 원폭 2세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피폭자지원법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입니다. 원폭 2세문제를 한국정부가 제대로 해결한다면 일본정부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특히 재일동포 NGO 활동가 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이야 말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및 침략전쟁의 최대의 희생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은 원폭투하 6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가해자로부터 단 한마디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정의의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탓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일본의 침략전쟁의 모든 책임을 대신지고 있어 이들의 명예회복조차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의 길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당시 일본정부의 책임방기로 인하여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중의 피해자라 생각됩니다. 저는 일본의 전쟁책임은 전쟁을 지시하고 명령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힘없는 선량한 원폭 피해자들이 대신 책임을 져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폭 피해자들이야 말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고 있는 전쟁책임의 짐을 침략 전쟁을 수행한 자들에게 넘기고, 원폭을 제조하고 투하한 세력들에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을 다하는 작업과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두가지 작업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순서를 설정하려는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원폭을 제조하고 사용한 세력들에게 당당히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이 지고 있는 짐을 침략 전쟁을 수행한 자들에게 지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우선 저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시 자신들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모든 정보를 관련 정부로부터 공개 받아 원폭 피해자들의 권리가 일본 정부가 맺은 조약에 의해 소멸되었는지를 밝히는 데서 그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의 피해자들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폭투하와 관련하여 과연 원폭을 투하한 목적은 무엇인지,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목적지로 하였는지, 원폭피해가 언제 어디까지 계속 되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별과 관련된 모든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이야 말로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런 점에서 일본에 계신 전쟁 피해자들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며 특히 원폭 2세 문제를 비롯한 원폭피해와 관련된 차별문제가 제대로 규명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제기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야말로 결코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민족은 지난 한세기 동안 외세의 지배와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전세계적 모순을 분단이라는 형태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한인 재외동포란 지난 세기 우리의 역사의 결정체라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우리 한인들은 전세계로 뿔어져 나가 각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란 세계화시대에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집중,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세기 우리들의 고통을 인류적 자산으로 확산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쟁과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